

[2014/06/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획토론회

- 제110차 노동포럼 -

“6·4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2013. 06. 18 : 16.00-18.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차 례

| | |
|--|----|
| • 발표: 6·4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 |
| • 토론 1: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 14 |
| • 토론 2: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7 |
| • 토론 3: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 21 |
| • 토론 4: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임연구위원 | 25 |

발표

6·4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지방선거 결과

1.1 당선자수 (2010년 결과와 비교)

| | 보수 | 진보 | 무소속 | 계 |
|-------|----------|----------|----------|----------|
| 광역단체장 | 8(1) | 9 | | 17 |
| 기초단체장 | 117(21) | 80(-16) | 29(-7) | 226(-2) |
| 광역의원 | 416(83) | 353(-39) | 20(-16) | 789(28) |
| 기초의원 | 1413(17) | 1208(21) | 277(-28) | 2898(10) |
| 교육감 | 4(-6) | 13(7) | | 17(1) |

보수: 새누리당('14), 한나라당/자유선진당/국민중심당/미래연합/친박연대('10)
 진보: 새정연/통진당/정의당/노동당('14),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국참당('10). 김두관/우근민은 진보에 합산.

1. 지방선거결과

1-2. 득표수(광역단체장, 광역비례)

| | 2010 | | 2014 | |
|-------|------------------|------------------|------------------|------------------|
| | 보수 | 진보 | 보수 | 진보 |
| 광역단체장 | 1017만 (49.3%) | 945만 (45.7%) | 1072만 (46.9%) | 1108만 (48.5%) |
| 광역비례 | 971만 (47.0%) | 1096만 (53.0%) | 1105만 (48.5%) | 1146만 (50.3%) |
| 광역의원 | 333 (43.8%) | 392 (51.5%) | 416 (52.7%) | 353 (44.7%) |

* 사회당/평화민주당도 진보에 합산(2010)

| | 당선자('10) | 득표율 | 당선자('14) | 득표율 |
|-------|----------|-------|----------|-------|
| 서울특별시 | 관노환 | 34.3% | 조희연 | 39.1% |
| 인천광역시 | 나근형(보수) | 25.4% | 이정연 | 31.9% |
| 경기도 | 김상관 | 42.3% | 이재정 | 36.4% |
| 강원도 | 민병희 | 39.9% | 민병희 | 46.4% |
| 대전광역시 | 김신희(보수) | 41.6% | 설종호(보수) | 31.4% |
| 세종시 | | | 최교진 | 38.2% |
| 충청남도 | 김종성(보수) | 69.2% | 김지철 | 31.9% |
| 충청북도 | 이기용(보수) | 46.3% | 김병우 | 44.5% |
| 광주광역시 | 장휘국 | 39.8% | 장휘국 | 47.6% |
| 전라남도 | 장만채 | 55.0% | 장만채 | 56.3% |
| 전라북도 | 김승환 | 29.0% | 김승환 | 55.0% |
| 대구광역시 | 우동기(보수) | 31.3% | 우동기(보수) | 58.5% |
| 부산광역시 | 임혜경(보수) | 20.0% | 김석준 | 34.7% |
| 울산광역시 | 김복만(보수) | 37.4% | 김복만(보수) | 36.2% |
| 경상남도 | 고영진(보수) | 25.9% | 박종훈 | 39.4% |
| 경상북도 | 이영우(보수) | 73.9% | 이영우(보수) | 52.1% |
| 제주도 | 양성언(보수) | 47.9% | 이석문 | 33.2% |

1-4. 주목할 점

1-4-1. 진보의 선전: 광역단체장-광역비례-광역지역구-기초비례-기초단체장-기초지역구 순.

-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의원>단체장, 비례의원>지역구의원, 기초>광역 – 진보의 두 의미가 서로 상충
- 보수/진보, 또는 정당(이념)간 경쟁의 형태로 어젠다가 축약될 때 진보의 침투력이 강화된다 – 전선이 모호해지면 보수의 입지 강화
- 비례대표제가 진보진영에게 유리(2014년 광역의회 의석분포에서 심한 왜곡)

1-4-2. 2010년 결과와 비교

-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보수 1명 증가, 전체득표율은 보수감소 진보증가
- 광역비례득표율, 광역의원당선자수에서 진보 지지 후퇴("진보" 정당의 몰락 때문)
- 기초단체장은 진보우위에서 보수우위로 역전
- 기초의회는 보수우위 계속

1-4-3 교육감 선거

- 10:6 → 4:13이라는 급반전은 일차적으로 보수분열의 결과(보수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단일후보로 나섰다면 진보의 압승은 없었을 것)
- 그러나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
 - 진보재선은 득표율상승(경기제외), 보수재선은 감소(대구제외)
 - 사실상 진보전원 재선, 역전된 6곳에서 큰 변화

1-5 종합적인 의미

- 2010년에 비해 진보세력 약간 위축 (종북몰이 성공, 민주당/"진보" 정당의 의제설정 실패)
- 변화를 향한 열망은 밑에서 꿈틀거리지만 (교육감 선거), 이 열망이 조직화되지 않는 못한 상태 - 진보적 리더십의 결핍 때문
- 보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진보가 안정감을 주지 못해서 결단을 미루며(non-decision) 현상유지를 묵인한 결과 - "절묘한 균형" 따위 헛소리로 이런 상태를 정당화하는 언론지형

2.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2-1. 누가 진보인가?

- 본래적 의미- 보다 나은 (공정, 정의, 삶의 질, 평화 등의 기초 위에서 성장) 사회를 꿈꾸는 지향성
- 오염된 의미 - 특정 인맥, 조직, 진영,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 "진보" - 폐쇄성, 내부적 독단과 전횡, 시대착오적이고 공허한 표어에 집착, 원심력만이 작용하고 구심력은 없다.

2-2. 연합, 연대, 연방

2-2-1. 교조주의, 도덕주의, 선협주의, 혈통적 민족주의 사고방식에서 실용주의, 세속주의, 경험주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사회진보를 위한 구상들이 사회의 진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대안 세력으로서 신뢰를 받기 위한 첫번째 토대

- FTA 반대, "광우병" 파동 등의 사례 - 그 결과 무슨 탈이 났는가? 지금도 여전히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성토 - 말은 무성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올 수 없는 가짜 문제들 - 이런 질문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와 혼동과 소외일 뿐.

2-2-2. 민주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

- 잡다한 이익들의 결합 (호남 토호, 당내 기득권, 선거조직과 브로커, 모종의 돈줄) + 정치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이념
- 새누리당의 전횡에 비해서는 진보. 당내부의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능
-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지지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정구조가 없어서 문제 - 총복몰이에 말려드는 이유도 일관된 가치지향성이 없이 여론에 영합하려는 우왕좌왕 때문.

2-2-3. 민주당을 어찌하나?

- 2004년 약진한 민노당의 전략 - 민주당을 먼저 해치우고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한 다음에 한나라당(당시)을 상대한다 - 그 결과 2007-8년 동반 참패, 2012-14의 분열과 몰락 (문국현과 안철수도 똑같은 오류 답습)
- 그렇다고 민주당의 울타리 안에서 합할 필요는 없다 (안철수의 패착)
- 민주당 울타리 안에서도 어차피 집단의사결정규칙의 확립과 공정한 게임의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 - 이것이 있다면 다양한 정당들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안별 연대와 기능적 공동보조가 가능.

2-2-4. 울타리가 아닌 기능의 연대

- 정당 내부 분파들 사이의 경쟁이나 정당들 사이의 경쟁이나 똑같은 형태
- 정당 내부의 분파들이 통합된 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여러 정당도 기능별/사안별 통합이 가능 - 선거연대, 정책연대, 공동정부 등등...
- 의견 일치를 추구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견들이 드러난 다음에는 절차에 따라 집단의사를 정하고 소수파는 (당분간) 승복
-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만 집단의사를 정하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개인의견과 개별행동을 허용
- 중앙당/지방당의 관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에서도 연방주의적 사고가 필요 -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통일 후의 바람직한 체제로서도 유일한 길.

3. 적실하고 발본적인 의제

3-1.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 권력을 법이 통제하지 못한다.
- “법”이 법대졸업생들의 생계수단일 뿐, 인민의 결단을 반영하지 못한다.
- 군부의 비밀, 관료들의 은폐습성, 갑들의 을에 대한 일상적인 횡포와 강압은 모두 공동체의 수사권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 - 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이 필수.
- 경제민주화, 조세정의, 기타 모든 개혁의제는 권력에 의한 은폐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공염불

3-2. 사회적 자유주의

- 사회적, 진보적, 개혁적, 복지국가 자유주의 - 밀, 그린, 홉하우스, 케인즈의 노선 - 헌정주의(법치주의) +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연대해서 강자의 전횡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도록 국가(공동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 현실의 역사에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이와 같은 방향으로 수렴.

3-3. 발본성과 적실성

- “사회적 자유주의” 일곱 글자는 별로 발본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령 평시강제징집철폐라든지,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혁 등은 현실의 맥락 안에서 더 이상 발본적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의제.
- 월급쟁이로 전락한 한국의 받아쓰기 언론이라든가 이처럼 발본적인 의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호소하고 설득한다면 다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적실한 의제

3-4. 몇 가지 세목

3-4-1 사법개혁

-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 직선제
- 판사(대법원, 헌법재판소 포함)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라는 제한 해제 - 예컨대, 철학교수, 고시를 보지 않은 법학교수, 정치학교수, 여타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왜 판사의 자격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 배심재판의 확대
- 명예훼손, 통신기밀보호법, 공직선거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
- 국회/인권위/감사원/국세청의 강제수사권.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특위의 사법적 지위 확인 -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3-4-2 의회개혁

-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 국회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하고, 명부에서 250명, 지역구에서 250명 선출. 전체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분배(독일/뉴질랜드식 MMP)
- 상시국회(예산안 3-4월에 제출)
- 지방정부의 구성과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도록 정상화 - 정치사회를 하나의 자발적 결사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주권은 지방 단위에서 출발해서 그 일부만을 중앙에 위임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변경 - 일상적 감사는 감사원이, 특별한 감사는 국회가 맡도록.

3-4-3. 병무개혁

- 한국에서 군대는 문민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의 성역 - 모든 은폐와 부패와 조작과 비리의 온상
- 사병수를 줄이고 직업군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병수 감축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다)
- 평시강제징집제 폐지(자원병 + 직업군인), 여성 자원자에게도 입대할 길 개방. 장애인이라도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기능에 따라 군직책 개방
- 직업훈련, 사회적 재교육 기관으로 군대의 위상 확인
- 군대/국방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

3-4-4. 교육개혁

- 초중등 교육의 지방화 - 장기적으로는 각 학교 단위에서 주요 정책 결정, 우선은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
- 대학통합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국립대학으로 통합, 우선은 사립대는 유보하고 국립대학들을 캘리포니아형 연합대학으로 재편성

3-5-5.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 지방정부의 구성과 선출에 관한 규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
 - 인구 10만명 이내 기초단체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렇듯이 5-10인 정도로 구성되는 평의회(단체장은 그 안에서 호선) 형태로 수렴할 것.
 - 다양한 형태의 광역정부(행정부-의회 관계),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 - 실험을 통한 자율적 개선의 여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직적 관계를 기능적 관계로 대체.
 - 지역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정당/정치조직의 출현 고무, 기능별/사안별로 지역들을 관통하는 연대 장려

4. 요약

4-1. 6·4 지방선거는 변화를 갈망하지만 믿을 만한 대안세력이 없어서 결정장애에 빠진 유권자의 정서가 표출된 결과 -> 현상유지(이대로 가면 2016년, 2017년 선거에서도 결과는 비슷할 것)

4-2.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은 사회적 생명력의 핵심 - 다양성이 문제는 아니고, 필요할 때 다양성을 아우르면서 집단적 결정을 생성할 수 있는 역량(공동체의 공적 역량)이 없는 게 문제

4-3. 연방주의적, 절차주의적 사고로 전환하지 못하면 진보에 미래는 없다.

4-4.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개혁에서 가장 초점이 되어야 할 의제는 헌정주의(법치)의 확립 - 권력에 대한 법의 통제, 사법의 민주화, 정부와 기업의 관료제가 비리를 은폐할 수 없도록 유사시 외부에서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

4-5. 구체적으로는 사법개혁, 의회개혁, 병무개혁, 교육개혁, 지방자치, 등을 5대 구조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인내와 이치를 통해 유권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토론 1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정치세력의 과제> 토론문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1. 지방선거 결과

- 보수(우)-진보(좌)의 대립구도가 지닌 의미. 독재-민주/냉전-평화라는 역사발전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구도를 해체시킨 새누리 박근혜 정권의 통치프레임. 현 시기 좌-우대결 구도는 기득권의 안정적 재생산, 중복 좌파 딱지 붙이기 이념 공세를 반영한 시대착오적 진영논리로 작동함.

- 광역단체장 여야균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 진보 세력의 예견된 참패.

- 아젠다 실종의 선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로 전쟁을 앞두고는 대혼란의 정치 공천 과정에서는 구태정치로 일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책임 무기력한 대응과 세월호 참사에 기댄 정권 심판론. 진보세력 사회경제적 아젠다와 대안 제시 없는 관성의 선거(인천 정의당 야권연대. 통진당 먹튀 정치).

- 교육감 선거, 세월호 참사 이후 '인간존중'의 교육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새누리-새정치로 대표되는 양당 독점 구도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인간화' 교육에 대한 지지 표출로 보임. 보수진영의 분열과 함께.

- 보완1; 20-40세대와 50-60세대에서 고착화되는 투표 행태와 40%가 훌쩍 넘는 무투표층.

기계적 합산 4-6%대의 진보 정당 지지.

젊은 세대의 변화에 대한 열망, 늙은 세대의 묻지마 새누리당지지, 양당독점구도(진영논리)에 대한 혐오와 투표로 세상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 참패했지만 지지 토대가 남아 있는 진보 정당.

-보완2; 서울시장 선거. 캠프운영-자발적 자원봉사 조직과 수평적 네트워크, 계급계층의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 '노동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노력. 소통의 리더십. 당의 지원.

2. 누가 진보인가

- 20-40세대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수렴하는 정치세력.

- 보수-진보, 좌-우 구도에 기초한 진영논리를 해체하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물음-'국가란 무엇인가?'-에 답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고 소통하는 리

더십의 정치세력.

- 변화와 혁신은 새정치민주연합, 분열된 진보정당에게 공통으로 부여되는 과제.

3. 발본적 의제

- 정치개혁: 양당 독점 구도,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진영정치를 타파: 다당제 체제.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다양한 정치집단의 연대연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고리의 확보.

- 복지국가, 안전국가를 위한 경제개혁: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파괴시키는 '늪은 국가'를 '젊은 국가'로 개조하는 사회경제적 개혁. 그 중심에 놓여 있는 노동의제.

- 정치 경제 개혁 아젠다를 급진적이면서 개방적 수평적 전국적으로 소통시킬 새로운 '젊은 정당'의 건설이야말로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에게 주어진 과제.

토론 2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정치세력의 과제> 토론문

서북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2014년 지방선거의 의미

- 2012년 총선/대선과 2016~2017년 전국선거 사이에 잠정적 균형상태 확인.
- 선거를 매개로 한 정당-유권자 관계의 성격(변화), 선거결과가 강제하는 국가(지방)정책방향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환적 계기를 만든 선거라기보다 2012년이 만들어낸 구조를 확인하는 선거로 볼 수 있어.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의석수 등의 배분 결과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1~3% 근소한 격차로 승패가 갈렸던 여러 단위 선거결과는 정부·여당 vs. 민주당 중심 야당 블록의 잠정적 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
- 이 상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나타난 박빙경쟁상태의 연장에서 해석될 수 있어, 51:49의 힘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
- 전국단위 진보교육감의 다수 당선결과는 기존 진보교육감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규모면에서 보면 기 시행한 진보교육(그 내용이 무엇이든)의 결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막연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
-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기대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교육에 관한 한 진보의 의제가 실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기회는 2016-17년이 될 것.

2.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모든 정당의 리더십 교체기가 맞물려 있어, 새누리당의 post-박근혜 체제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리더십 구성, 통진당, 정의당, 사회당, 노동당 역시...
- 기대보다 훨씬 무능한 박근혜 정부, 선거가 없는 향후 2년 간 리더십교체를 둘러싼 빅뱅 시기를 주도적으로 관리해낼 능력은 없어 보여.
- 정당체제 내 모든 정당들의 리더십 교체가 함께 맞물려 진행될 때 새로운 리더십을 자임하려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경쟁의 규칙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던 경험(헌법개정,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사법개혁....).
- 권력구조와 경쟁의 규칙을 변경하려는 논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치세력들이 이 논의에만 매몰되어 더 중요한 의제들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은 우려스러워.
- 향후 2년은 짧지 않은 시간, 모든 정당 및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과 경쟁규칙 논의에 매몰되어가는 동안 민영화, 대기업 및 고자산층 중심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의제들이 견제 받지 않고 착착 시행되어가는 시나리오가 최악...

3. 의회·사법·교육·지방자치 등 의제의 성격

- 이 의제들은 발표문이 지적하는 바처럼 한국사회 구조변화를 시도하는데 가장 근본적 수준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
-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인 달성목표로 ‘정치개혁, 사법개혁’등을 전면내 내걸고 추진해나가는 방식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 이 의제들은 기본성격에서 유권자들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해내기에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제, 포퓰리즘적이고 왜곡된 다수의사 형성이 매우 쉬운 의제영역.
- ‘국회를 없애자, 의석수를 200석으로 줄이자, 기초의회를 임명직으로...’
- 특정 언론집단을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감을 동원하여 특정 분파에게 유리한 제도대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 다음, 그들만의 거대로 경쟁규칙과 권력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의 성과로 포장했던 경험은 민주화 이후 지난 26년 간 반복되어 왔던 패턴.
- 누구나 자신이 선호하는 제도대안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제도대안의 선택은 원내 제1당과 제2당 혹은 그 정당들 내부의 분파 간 협력에 달려 있어.
- 개헌 혹은 경쟁규칙과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는가, 결정권을 손에 쥔 세력이 선호하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제도변화의 필요성만으로 개입하는 건 ‘남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이 영역의 제도변화는 사회경제적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유권자의 신뢰를 획득한 후 이를 자산으로 의회, 정당, 선거, 사법, 지방자치 등의 개혁의제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 주도권 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식이 타당.

4. 무엇을 해야 할까?

- 이미 드러난 사회경제적 의제들을 선점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결사조직을 생성하고 기존 결사조직들을 확대하며, 이들 속에서 새로운 정치엘리트를 발굴하고 지지기반을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 비정규직 노조 결성 지원 및 확대, 원전이나 개발반대 주민결사 지원, 민영화 및 권경언 유착 폭로 등 공공영역 노조(결사) 활동 지원...
-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사회구조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변화를 추동하고 유지해낼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의 형성 및 확대.
- 노동, 여성, 다양한 이익결사들의 지지를 조직해내지 못한 채 제도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돌이켜 보아야.
-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제도개혁은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낳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제도변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해낼 수 없

어. 사회적 힘을 가진 세력은 언제든 이를 뒤엎을 수 있기 때문.

5.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주목해야

- 극단적 양극화와 사회적 기반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유권자들은 계층적 정치태도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어.
- 지역이나 세대, 주관적 이념 등으로 정당지지나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설명력만을 가질 뿐, 대개 허위의 이미지를 창출해.
- 유권자의 이념적 보수화 가설? 주관적 이념성향에서 보수적이라는 응답자가 10여년 전보다 일정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걸 진보의 해체로 인한 결과인지 실제 유권자집단의 보수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 특히 2010년 이후 통진당, 이석기 사태 등으로 진보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중도가 늘어난 반면 강한 보수 성향 유권자의 태도는 일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가시적 현상일 뿐.
- 구체적인 정책태도 등에서 유권자들은 10년 전보다 상당히 왼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 성장보다 복지를, 개발보다 환경을, 경쟁보다 평등교육을, 원전확대보다 축소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유권자 비율은 늘었어.
- 2010년경 이후부터는 저(低)자산층일수록 복지정책 선호가 월등히 높아지고, 비정규직 해법이나 부동산개발 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 다만 대북 정책 등에서는 과거보다 보수적 태도를 보여, 이걸 최근 변화된 한반도 주변 정세(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노선의 결과로 해석.
- 2014년 지방선거 유권자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며 계층적 정치태도는 강해져...

6.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조직화에 주력해야

-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여러 방향에서 정치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스스로 조직화를 시도하고 정당지지나 투표선택에서도 다른 선택을 보여주고 있어.
-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출현이 중요해. 새로운 정치세력이든 기존 정치세력의 재편이든 혹은 기존 정치세력의 정체성 변화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편에서 이들을 지지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더 큰 맥락의 구조변동도 시도할 수 있고 유의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토론 3

이병렬

노동 · 정치 · 연대 집행위원장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정치세력의 과제> 토론문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1. 6.4 지방선거 약평

1) 박근혜정권 심판 실패

- 세월호 참사 심판론의 중심인 경기, 인천의 패배.
-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기초변화가 지방선거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앞으로도 특별히 기초가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한국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이 참 강하다는 현실을 보여준 선거.

2) 야권의 사실상 패배

-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심판론을 내세웠으나 심판이 안 됨.
- 현 정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박근혜 살리기를 내세운 여당의 선거 전략을 넘지 못함.
- 무능한 야당,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데 실패.

3) 진보정당 참패

- 그간 진보정당의 분열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가 예상되긴 했으나, 의미 있는 선거(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서 완패함.
: 진보정당의 존재감 상실.
- 분열된 진보정당을 극복하려는 노력 부족, 정권과 자본의 '종북' 공세.
-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잇는 진보적 의제개발 실패.
: 진보의 의미를 보여주기 보다는 진보의 문제점만 드러낸 선거.

4) 진보교육감 승리

- 세월호 심판이 교육 쪽에서만 부분적으로 작동.
: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부모들의 분노속에서 선거구도가 유리하게 형성된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
- 진보의제(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와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분열된 보

수후보 구도.

- 그간 1기 6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들의 진보적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국민들에게 공감할 얻은 측면이 있음.
-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확대 등 공교육 강화.
- 당선자들의 득표율을 볼 때 단일화 되지 못하면 당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단결이 승리의 기본전제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확인된 선거.

5) 노동자들의 조직적 대응 미약

- 형식상 통일된 선거방침을 정했고, 노조나 현장조직들 내에서 큰 이견 없이 결정되었으나 현장에서 통일되게 집행되고 발휘되지 못함.
- 현재 민주노총, 산별노조 등에 존재하는 분열된 진보정당 세력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한 방침.
- 어느 한 방향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과 이를 반영한 방침.
- 별로 현장에서 할 것이 없는 방침이 되어버림.
- 일정하게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는 효과와 이를 토대로 아주 일정하게 진보교육감의 당선에 기여.
- 분열된 진보정당이 조장하는 현장의 분열을 극복하고 강력한 노동정치를 복원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선거.

6) 진보의 존재감 미약과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짐

- 대중들과 현장의 간부들이 이제 더 이상 진보정치의 필요성,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지 않는 듯(?).
- 진보정당이 지방자치에서 인상적인 활동이 보여주지 못한 것.
- 야당과의 차별성 크게 없어.
- 1기 6개 지역 진보교육감이 주는 의미: 진보교육의제 선도.
: 국민들의, 학부모들의 긍정적 판단 작용.

7) 최악의 상황에서도 10%의 진보정당 지지 확인

- 2012년 총선 때보다 약간 낮은 수준.
: 이것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정당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받은 지지율이어서 진보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해야 될지(?).

2. 진보정치 세력의 과제

-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진보정치 회생과 대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준 선거.
 - : 분열된 진보정당으로는 대중의 힘을 결집하기가 어려움.

- 진보정당의 재편 통합을 통한 활로 개척.
 - : 진보정당의 힘이 커져야 전체적인 상황에 개입 가능.
 - : 단결되지 않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상층 차원의 진보정치 재편 활동과 현장과 지역에서의 노동정치, 지역정치 활동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함.
 - : 이는 서로의 활동이 서로 비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 : 분열된 상태에서 현장 정치활동은 오히려 분열을 고착화하고 서로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돼 대중들의 외면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강력한 노동정치에 기반한 분열된 진보정당의 통합, 재편 노력이 중요함.

- 대중조직 차원의 정풍운동 필요.
 - : 더 이상 진보정당의 분열은 안 된다는, 현장의 분열과 대중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현장으로부터 지역, 산별을 넘어 총연맹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 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
 - : 지역과 현장에서 독자적이 아니라 공동으로 진보정치활동의 내용들을 만들고 실천하는 방안 시도.
 - : 현장에서 제 현장조직들의 공동활동.
 - : 지역에서 노조와 진보정당들 간의 공동활동.

-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운동 시작.
 - : 가능한 최대한의 진보정치 세력을 모아 총선 전까지(2015년) 노동 중심 진보정당 창당.
 - : 지방선거 후부터 이를 위한 논의 시작

토론 4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임연구위원

<6.4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토론문

— 일상의 정치 활성화 —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임연구위원

○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 진정한 진보세력과 진정한 보수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반(反)새누리당 진영이라고 해서 이를 진보세력이라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는 회의가 큼.

○ 박동천 교수의 발제 글에서와 같이 진보를 “보다 나은(공정, 정의, 삶의 질, 평화 등의 기초 위에서 성장) 사회를 꿈꾸는 지향성”이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진보개혁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큼.

— 물론, 보다 더 따지기 시작하면, 소위 진보정당들이라 해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내부 쟁점은 차치하고, 현 정부의 성격과 최근의 세월호 참사, 밀양 송전탑 사태, 제주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노조 등 노동탄압의 문제를 야기한 직접적 정치 주체인 새누리당에 대한 부정적 입장조차도 이번 선거에서는 충분히 표출되지 못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나 패배냐 하는 논란 이전에, 착잡한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더욱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이번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진보를 표방한 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완패로 결과가 드러났고, 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 결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임.

○ 양당구조 자체가 공고화 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는 박동천 교수가 언급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주체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좁아졌다는 점은 과연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진보적 정당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과 과제를 남김.

—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당선자들이 진보적 가치를 품고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정당 자체의 성격이라 보기는 힘들고,

-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도 진보적 가치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 물론,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따라 ‘박근혜 정권 심판’과 “박근혜 정부 용서”라는 중앙정치의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유권자들도 둘 중의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선거결과라는 점에서 이 시기 특수성이라 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번만큼 큰 바람은 아니었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 그러한 진영논리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진영논리가 더욱 심화된 선거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진영논리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도 그러한 진영논리에 대응한 전략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음.

○ 따라서 정치적 진보개혁세력의 과제는 이러한 진영논리를 극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봄. 즉, 진보개혁적 정치세력화는 이 두 거대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주창하는 군소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일정한 정치적 세를 형성·발휘하고, 이들이 기존 정치세력에 일정한 틈을 만들고 정치적 영향력을 보다 크게 발휘하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한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음.

○ 첫째, 정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제도 개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봄. 물론, 이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비례대표의 대폭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오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기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함

- 지역정당 등 시민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보장. 현행 정당법에서는 5개 이상 광역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참여해야만 정당으로 인정해 ‘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이는 시민들이 정치조직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 이는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기능을 함.

- 현행 2인 중심의 지역구 구도를 최소 3인 이상으로 재조정. 이를 통해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 둘째,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함.

- 지난 번 통합민주당 사태는 ‘종북’몰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 빌미는 내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음. 그러나 내부 운영의 민주성에 대한 것은 진보정치세력을 표방하는 제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함. 이는 시민들의 해당 정치세력 및 정당에 대한 신뢰도와도 관련이 깊을 뿐 아니라, 진보정치의 실질적 모습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는 직결됨. 새로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슨 근거로 새로운 진보정치를 구축하는 세력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내부 운영의 민주성에만 국한되지 않음. 진보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에는 시민들이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음. 그 진보적 가치가 자신들의 구체적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실제 실현가능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진보적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일상의 정치를 시민들 생활 속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

○ 셋째,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당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민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일상의 정치보다는 개별 후보자들을 제도정치권에 출마시키려는 전술을 사용한 곳이 많음. 이는 실상 시민정치, 시민들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곤 함. 그보다는 시민들의 집단적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전술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 시기만이 아니라 일상의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非)선거 시기의 일상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점에서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Community Based Organization)들은 가치 선언 중심과 시민대변활동을 넘어, 직접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식이 확산·심화될 수 있는 풀뿌리운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특히, 이러한 일상활동 자체가 시민들의 정치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함.

○ 위의 세 가지 과제는 하나하나가 분리된 것이라기보다 서로 긴밀히 연계된 과제라 할 수 있음. 즉, 제도개선과 정치세력들의 대안적 운영과 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정치활동의 활성화는 함께 병행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하겠음.

-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 시 과천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주민들이 정치모임을 만들어 두 개의 지역구에 자신들의 후보를 직접 선출해 출마시켜 모두 당선시킴.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심판'과 '용서'로 전국을 양분한 이슈로 인해 예전의 득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 지역구에서 3등으로 당선. 즉, 이들의 당선은 3인 선출 지역구였기 때문에 가능했음.

- 이 결과는 오래전부터 활동하던 진보정당의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는 득표차로 제쳤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일상적 지역활동에 대해 고민할 과제를 제기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물론, 선거 이후 이들이 출마시킨 풀뿌리 시민정치모임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정치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태껏 실패를 경험했듯이 당선된 의원의 개인 정치활동으로 전락할 지는 향후의 과제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에 진출한 진보개혁 정치집단과 시민대변형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 관련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개혁세력의 일상(정치)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및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상의 노력이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후자의 경우 일정한 시기에 반짝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구체적 변화와 실천이 전개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장기적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과제가 정당하고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결과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의 퇴조라는 점에서 착잡한 마음이 없을 수 없음. 그런 점에서 앞서의 과제를 중심으로, 정당성과 명분, 가치선언 중심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치, 풀뿌리정치의 가능성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다양한 기획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